

# 가정안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Family Safety  
of One-Person and Single-Parent Households in Kore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부 교수 서지원\*\*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eo, Jiwo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br>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Recently, concern about family safety is rising again a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context of family healthiness and well-being in Korean society despite of the dramatic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family safety of singles and single-parent household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level of their family safety. Data are from the 10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analysing one-person households(N=2,017) and single-parent households(N=172). One-person households were categorized as three groups by age(the youths/middle-aged/the elderly) and single-parent households were also three by family types(mother-child/father-child/grandparent-chil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of family safety index was highest among middle-aged, while single youths had the fewest problems in terms of family safety. Second, social capital was found to vary by family structure. In the one-person households, all the levels of the social capital variables, including trust, bond,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differed significantly; only two variables, bond and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외연수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서지원(jiwonseo@knou.ac.kr)

embrace, differed in the single-parent households. Third, social capital differed between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others significantly. Forth, the positiv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overcoming family safety problems were investigated.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represents an alternative resource for overcoming economic hardship for low-income one-person/single-parent households, especially for middle-aged singles and father-child single-parent household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family policy and programs.

Key Words :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가정안전(family safety), 1인가구(one-person households), 한부모가구(single-parent households), 저소득가구(low-income households)

## I. 서론

최근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가정범죄 사건이 여러 차례 매체에 의해 보도된 이후 우리사회 가정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례없이 급진전한 산업화가 가져온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계층의 양극화와 가족기능의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지난 2016년 전체 국가재정 지출에서 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OECD 국가의 GDP 대비 복지재정 규모로 볼 때 여전히 평균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10.4%에 불과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7). 과거 1990년대에 약 2% 수준에 불과하였던 복지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보장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한편, 정부는 약화된 가정 기능을 보완하고 가족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6년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종종 발생하는 심각한 가정문제 양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기초적 생존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일상의 영위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

닌지 우려하게 한다.

이에 정책의 방향을 복지재정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가족이 위기에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에 두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사회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가족이 어떠한 종류의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가족 스스로가 개별 가족 구성원은 물론 전체로서의 가족 간 유대, 가정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 등을 이용함으로써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안전망의 구축을 하나의 주요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자원경영학(family resource management) 분야는 과거 가족원 스스로에 의한 삶의 질 증진에 초점을 맞춰 온 전통적인 가정학(home economics)에서 시작하였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개되어 온 실용학문으로서의 생활과학(human ecology)에 속한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포함하여 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행복’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지향하여 왔다. 즉, 연구의 관점을 가정 내부의 자원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복지(family welfare)’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노영주 외, 1999), 이후 가정생활의 다양한 기능영역을 고려한 생활표준을 제시하는 ‘가정건강성’의 개념이 도출

되어 궁극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조희금 외, 2006).

지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가정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정부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론적·실천적 믿음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사’라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며, 이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한 돌봄가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시대가 지향하는 미래세대의 가족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과소평가될 수 없음에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학문적·정책적 지향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며, 이러한 성찰과 고민은 미래의 지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의 결핍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가구형태인 다른 가족원이 없는 1인가구와 자녀양육자의 수가 적은 가구, 즉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가정안전의 문제에 대하여 대안적 자원의 효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세대를 막론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한부모가구 역시 모자가구나 부자가구는 물론 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구유형이 존재한다.

기존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경제적 빈곤과 돌봄의 결핍에 따른 문제에 주목한 소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에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실제로 유

사한 가구형태가 1인가구로 유사한 경우에는 연령대별, 계층별로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청년이나 중장년세대로 구성된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인분석과 진단 등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한부모가구 역시 양부모가구에 비해 자녀양육에 있어 필요한 가족자원의 결핍이 우려되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한부모가구는 2015년 현재 1,783천 가구에 이르며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 수준으로 2010년 9.1% 수준에 비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 한부모가구의 유형 역시, 소득계층이나 가구주의 성별 등에 따라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속성을 지니므로 이들 가구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접근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그 가족체계의 특성에 따른 가정안전성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가족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의 의의를 가정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 유형 중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 존재하는 저소득가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사회자본이 궁극적으로 가정안전에 미치는 자원으로서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구유형별 생활수준의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경험적 자료 축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정부의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정책의 과제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실천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가족상황 진단지표를 보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가정안전의 개념 및 실천적 적용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다양한 가정생활의 역

량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가정건강성’의 척도를 들 수 있는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의 상황과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정건강성 척도는 <표 1>과 같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이는 어떤 특정 유

〈표 1〉 가정건강성 척도

지표	영역	질문문항 (우리 가족은 ~)
가족 관계 지표	소통	1. 서로 말이 통한다.
		2. 서로 ‘사랑한다,’ ‘민는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3.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4.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5. 힘들 때 서로 도와달라고 말한다.
	친밀감	6. 서로의 일상생활과 고민을 알고 있다.
		7. 함께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8. 서로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9. 가족들 각자의 차이와 개성을 알고 서로 존중한다.
		10. 힘들 때 서로 도와달라고 말한다.
자원 관리 지표	가치	11. 서로 공유하는 규범이나 규칙이 있다.
		12.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
		13. 함께 계획을 세우고 생활한다.
		14.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다.
		15. 여자나 주부가 없어도 집안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족자원관리	16.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활용한다.
		17.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18. 미래에 큰 돈이 들어갈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
		19. 질병, 예측하지 못한 일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20.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합의가 잘 된다.
외부 관계 지표	일-가정균형	21. 일, 가정, 여가의 균형을 이루고 산다.
		22. 일이나 학업으로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든다.
		23. 가족이 함께 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4. 각자의 일과 가족공동의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
		25. 직장일이나 집안일이 서로 많아도 잘 조절한다.
	지역사회관계	26. 동네의 현안(선거후보, 축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27.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자녀나 이웃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잘 실천한다.
		28. 도움을 부탁하고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이 있다.
		29. 사회문제(환경, 폭력 등)에 관심을 가지며 잘 알고 있다.
		30. 이웃을 기꺼이 도와준다.

형의 가족해체나 실패의 결과에 초점을 둔 그간의 연구와 달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를 긍정적 관점을 강조하며 가족이 스스로 어떤 사건이나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의 가치를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조희금 외, 2006).

이러한 가정건강성 척도는 일반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내원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의 상황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개별가정이 처한 상황을 생존의 차원에서 ‘안전’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지니는지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는 여전히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적 개발은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내원한 가정의 초기 진단과 사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성 척도에 더해 최소한의 안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선(thresholds)을 추가로 설정하여 바로 현장에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세부지표의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족자원관리 하위지표 영역을 수정 보완하여 가정기능의 건강성을 측정함에 있어 가장 최저수준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관리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항목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 ‘가정안전’의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가정안전의 개념은 가정건강성 평가척도에서 자원관리지표 중 가족자원관리의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추가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개별가정이 처한 가족자원관리의 상황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측

정하는 문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처럼 가정안전성 지표를 보완함으로써 기존의 건강성 기준으로는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단계를 진단하고 이러한 기초정보가 자칫 필터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 빈곤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도 맞춤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안전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나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개념인 ‘사회안전망’과 같은 용어에서 사용되는 안전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노령,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최일섭, 1999), 이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단위로 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영위가 어렵거나 빈곤한 상태에 처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제도적 환경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정안전 수준은 우선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가정생활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복합적인 가정생활의 영역별로 필요한 자원보유 상태와 그에 따른 관리의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척도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안전성 척도의 개발을 위해 <표 2>와 같이 한국복지패널의 질문문항 중에서 가족자원관리를 위한 자원의 보유 및 관리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하나의 예시 혹은 대안으로서의 가정안전의 척도로 선정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문맥에 맞게 약간 보완하였다.

〈표 2〉 한국복지패널 질문문항을 활용한 가정안전 척도의 예시

구분	있다	없다
1.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중단된 적이 있다.	①	②
4.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5. 겨울에 추위도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6.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7. 가족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	①	②
8.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9.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0.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①	②

## 2. 사회자본의 개념과 의의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사회자본이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중요한 한 유형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자본의 속성 중 가족 내부 즉,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자녀의 성취를 연구한 Parcel & Menaghan(1994)의 연구에서는 가족원 간의 관계에서 기인하여 인적자본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가족사회자본(family social capital)’이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즉, 재무자원이나 인적자원과 같은 가족자원(family resource)과 더불어 사회자본 역시 하나의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서지원, 2006).

사회자본이론은 신고전경제학 이론을 보다 확장하여 사회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교환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님에 주목한 결과 새로운 이론으로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즉, 가시적이지 않은 가치, 신뢰, 유대 등이 실제로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Field, 2003). 실제로 사회자본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여 왔으며, 각각의 개념화에 따른 관점에서 결과와 기대효과를 달리한다.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기

여한 대표적 학자로는 Bourdieu, Coleman, Putnam 등이 있으며, 이들은 관계적 속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사회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다양한 이론적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Bourdieu(1986)의 사회자본은 ‘문화자본’으로 개념화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사회자본은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의 범위와 더불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이 지닌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총량과 같다고 보았다. 한편, Coleman(2000)은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달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사회자본이 행위자들의 관계를 이루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비가시적인 자본으로 보았다. 특히, 가족관계와 지역사회에서 축적된 사회자본이 결국 인적자본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Putnam(1995)은 공동체의 협력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속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신뢰나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그 가치의 전달통로인 네트워크가 잘 작동할 경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국사회 공동체의 쇠락과정을 진단하였다.

실제로 사회자본이 갖는 거시적 경제 효과에 주목한 결과 자본으로서의 기여가 인정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 1980년부터 1992년 간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뢰의 수준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정적 관계가 존재하며 신뢰가 10%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nack & Keefer, 1997). 또한 Whiteley(2002)는 1970년부터 1992년 34개국을 분석한 결과 신뢰가 1% 증가하면 1인당 실질 GDP가 약 .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Bank(2012)는 사회자본과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자원과 정보의 교환이나 흐름을 통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번영을 통해 정치적·문화적으로 기여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도 참여정부 이래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될 만큼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투자의 대안으로 논의가 확산되었다(임채원, 2006).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 사회 공동체의 경우 지역주민 간 신뢰와 유대로 인해 범죄율이 낮아 안전하며 평생학습 참여의 향상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자본의 축적이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나영선 외, 2005).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중시하는 가정-지역사회 간의 관계에서 개별 가정의 경제적 복지 및 인적자본의 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측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Grootaert & Basterleer, 2001). 또한, 사회자본이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산출이나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며 연줄, 인맥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사회자본에 대한 이러한 도구적 접근은 계층 간 사회적 불평등을 낳고 다른 계층 구성원을 배제하도록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Portes, 1998)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다시, 어떤 구조적 이유로 인해 재무자원이나 인적자원이 결핍되거나 저조한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규명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니는 사회자본이 가구유형별로 가족자원관리의 과정에서 다른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한국사회의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삶의 질

#### 1) 1인가구의 자원관리 특성과 정책적 지원 현황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율은 1985년 전체가구의 6.9%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현재 27.2%로 늘어나 지난 30년간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0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이 2인 가구였으나,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가구원수별 유형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6). 세대별로 1인가구의 형성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을 분석한 성영애(2013)의 연구에서는 35세 이하의 청년층, 35~64세의 중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우선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만혼의 경향으로 초혼연령은 2015년 현재 남성 32.6세, 여성 30.0세에 이르며(통계청, 2016), 이에 따라 청년1인가구의 형성은 생애주기구조상 일어나는 변화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1인가구의 증가는 복잡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구조

의 변화를 반영한다(김혜영, 2014; 정순희·임은정, 2014). 결국, 우리사회에서 홀로 세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시기가 점점 더 연장된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돌봄의 위기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서울특별시의 ‘2030 청년주택’ 사업과 같이 도시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안정지원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영위와 관련된 지원과 함께,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하에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이러한 사업은 저출산정책의 맥락에서도 인용되고 있는데, 원하는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인1인가구의 문제를 보면, 청년1인가구에 비해 훨씬 심각하게 돌봄의 부재로 인한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간 노인세대가 가구를 이루어 살아가는 형태는 규모의 측면에서 점점 축소되는 뚜렷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데, 점차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홀로 살거나 부부만 함께 사는 가구형태는 더 늘어나고 있다. 노년기에 1인가구 형성을 비롯한 가구형태의 변화는 빈곤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살다가 부부만 살거나 홀로 사는 1인가구가 되는 방식으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의 위험이 증가하며, 결국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기반이 약화되어 노인빈곤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김미선, 2016).

이들 홀로 사는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생활지원’과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비용지원’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2016년 현재 우리사회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노인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방문연계사

업, 자활사업 등이 있다.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도시락 배달 등 지역복지서비스와 연계하며,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종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국노인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반면, 1인가구의 유형으로 중장년세대에 속하는 경우,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 이외에 1인가구 자체의 문제에 따른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간발달의 단계에서 자립성의 문제가 적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 역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그에 대응하는 장기적 생활설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따라야 할 영역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 2) 한부모가구의 자원관리 특성과 정책적 지원 현황

한부모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크게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로 나뉘며, 조손가구나 청소년한부모가족 역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적인 지원대상의 유형으로 포함된다. 이들 한부모가 경험하는 자녀돌봄 시간을 비롯한 자원의 결핍 상황은 단순히 가계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중요하게 존재한다.

이들 한부모가구가 경험하는 주된 생활문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석된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1세이며 대다수가 이혼으로 형성되어 1.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



족부, 2015). 모자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47.3%로 부자가구가 19.8%였다. 이들의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월 189.6만원이었으며, 자산은 1/5 수준이었다. 월평균소득은 모자가구가 부자가구보다 낮았다. 이들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었으나 고용안정성이 낮고 장시간 근로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의 돌봄을 위해 87.6%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는 모두 양육 및 교육비용의 부담을 공통된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으나, 주로 경험하는 문제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주로 부자가구의 경우, 아버지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형성이나 가정생활관리 전반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자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등을 호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관리의 문제뿐 아니라 조부모의 건강으로 인한 돌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사회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현숙, 2016)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사회자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같은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았으나, 한부모가구 내에서는 빈곤가구나 빈곤하지 않은 가구 간에 그러한 특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서지원, 2013).

한부모가구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접근은 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한부모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률적 개념인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

제도로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현금성 지원이 있다(여성가족부, 2016).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취약·위기가족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역량강화 서비스나 가족보듬 서비스를 통해 심리 정서적 지원과 돌봄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고 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치유프로그램, 자조모임, 법률지원 등을 통해 가족역량을 증진하도록 돕고 있다.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은 배움지도사 파견을 통한 학습정서지원을 제공하며,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생활가사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자조모임 운영,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 III.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발표된 제10차 한국복지패널자료(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빈곤층 및 차상위층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조사되어 왔다(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 제33109호). 이 자료는 국내의 다른 자료에 비해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인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으므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외에도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공적보험, 주거, 재무, 생활여건, 정서적 상태 등 가정안전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다수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인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가족체계 특성에 따른 가정안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인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사회자본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1인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유형에 따라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사회자본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저소득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의 사회자본 수준이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3.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족자원의 측면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체계를 이루는 요소에서 가구원 규모와 가족구성원의 동거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각각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로 선정하였다. 우선 1인가구는 생애주기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 즉 만 35세 미만의 ‘청년1인가구,’ 만 3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1인가구,’ 만 65세 이상의 ‘노인1인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인가구는 총 2,017가구였으며, 이 중 노인1인가구가 1,454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장년1인가구와 청년1인가구가 각각 440가구, 123가구 순이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구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로 구성된 모자 또는 부자가구를 의미하며,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구에서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조손가구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한부모

가구는 총 172가구였으며, 모자가구가 95가구로 절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 조손가구가 43가구, 부자가구는 가장 적은 34가구였다. 이 때, 모든 변수는 가구주의 응답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 연구대상자의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가구형태별 연구대상자 수

구분		N (%)	구분		N (%)
1인가구	청년 1인가구	123 (6.1)	한부모 가구	모자 가구	95 (55.2)
	중장년 1인가구	440 (21.8)		부자 가구	34 (19.8)
	노인 1인가구	1,454 (72.1)		조손 가구	43 (25.0)
	계	2,017 (100.0)		계	172 (100.0)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표 4>와 같다.

##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가 이용되었으며,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교차분석( $X^2$ ), 두 평균의 차이검정(t-test),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별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4〉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가정안전	‘주거불안정’, ‘공과금 연체’, ‘단전·단수 등의 경험’, ‘공교육비 연체’, ‘난방 제한’,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신용불량’, ‘건강보험급여 정지’, ‘식생활 불균형’, ‘자살의도’ 등의 경험 여부에 대한 10개 문항의 합계로 측정하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안전 수준이 낮음을 의미(범위 0~ 10)
저소득가구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 이하인 가구 (1=예, 0=아니오)
일반가구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 (1=예, 0=아니오)
성별	남성 (1=예, 0=아니오)
혼인상태	결혼상태를 ‘유배우’, ‘별거’, ‘이혼’, ‘사별’로 구분
교육수준	학력을 ‘초졸이하’, ‘중졸’, ‘고졸이상’으로 구분
인터넷 이용경험	인터넷 사용 (1=예, 0=아니오)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
경제활동참가	지난 1년간 대체로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우 (1=예, 0=아니오)
거주지역	거주지역 권역을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권역),’ ‘중소도시(시 권역),’ ‘농촌(군 및 도농복합군 포함)’으로 구분
사회자본변수	
신뢰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함 (1=예, 0=아니오)
유대	지역사회 내에서 위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함 (1=예, 0=아니오). * 5점 척도에서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대체로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0=아니오’로, 이외 응답은 ‘1=예’로 재코딩하여 적용
수용	지역사회 내에 비선호시설(화장시설, 특수학교 등)의 입지에 대해 수용할 수 있음 (1=예, 0=아니오) * 5점 척도에서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대체로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0=아니오’로, 이외 응답은 ‘1=예’로 재코딩하여 적용
참여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1=예, 0=아니오)
사회자본지표	신뢰, 유대, 수용, 참여 등 4개 사회자본 변수의 값을 총합하여 사회자본지표 값을 산출함 (범위 0 ~ 4)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분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1인가구의 세대별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단독, 중장년단독, 노인단독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한부모가구 또한 세 유형인 모자, 부자, 조손가구로 구분하여 각 가구주가 응답한 일반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인가구			한부모가구		
		청년단독	중장년단독	노인단독	모자가가구	부자가가구	조손가구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57(46.3)	202(49.9)	223(15.3)	-	34(100.0)	15(34.9)
	여성	99(53.7)	238(54.1)	1231(84.7)	95(100.0)	-	28(65.1)
교육수준	무학	0(.0)	17(3.9)	563(38.7)	1(1.1)	0(.0)	17(39.5)
	초졸	1(.8)	121(27.5)	607(41.7)	0(11.6)	4(11.8)	17(39.5)
	중졸	0(.0)	71(16.1)	159(10.9)	11(.0)	5(14.7)	5(11.6)
	고졸	19(15.4)	139(31.6)	89(6.1)	61(64.2)	17(50.0)	4(9.3)
	전문대졸	30(24.4)	36(8.2)	4(.3)	8(8.4)	3(8.8)	0(.0)
	대졸이상	73(59.4)	56(12.7)	32(2.4)	14(14.8)	5(14.7)	0(.0)
혼인상태	유배우	14(11.4)	13(3.0)	21(1.4)	4(4.2)	0(.0)	16(37.2)
	사별	0(.0)	109(24.8)	1,279(88.0)	10(10.5)	3(8.8)	23(53.5)
	이혼/별거	3(2.4)	184(41.8)	132(9.1)	81(85.3)	31(91.1)	4(9.4)
	미혼	106(86.2)	134(30.5)	22(1.5)	-	-	-
기초생활보장	수급	2(1.6)	101(23.0)	251(17.3)	40(42.1)	8(23.5)	19(44.2)
	비수급	121(98.4)	339(77.0)	1,203(82.7)	55(57.9)	26(76.5)	24(55.8)
저소득 여부	일반	109(88.6)	224(50.9)	212(14.6)	41(43.2)	23(67.6)	12(27.9)
	저소득	14(11.3)	216(49.1)	1,242(85.4)	54(56.8)	11(32.4)	31(72.1)
경제활동참가 유형	상용직근로	66(53.7)	80(18.2)	7(.5)	24(25.3)	12(35.3)	0(.0)
	임시직근로	31(25.2)	63(14.3)	24(1.7)	20(21.1)	1(2.9)	1(2.3)
	일용직근로	6(4.9)	57(13.0)	41(2.8)	18(18.9)	3(8.8)	1(2.3)
	자활·공공근로	0(.0)	15(3.4)	54(3.7)	5(5.3)	2(5.9)	1(2.3)
	고용주	0(.0)	5(1.1)	0(.0)	0(.0)	1(2.9)	0(.0)
	자영업	4(3.3)	48(10.9)	180(12.4)	9(9.5)	9(26.5)	6(14.0)
	실업상태	3(2.4)	5(1.1)	0(.0)	0(.0)	1(2.9)	0(.0)
	비경제 활동인구	13(10.6)	167(38.0)	1,148(79.0)	19(20.0)	5(14.7)	34(79.1)
종교	있음	44(35.8)	200(45.5)	883(60.7)	49(51.6)	11(32.4)	21(48.8)
	없음	79(64.2)	240(54.5)	571(39.3)	46(48.4)	23(67.6)	22(51.2)
거주지역	대도시	69(56.1)	201(45.7)	503(34.6)	50(52.6)	17(50.0)	17(39.5)
	중소도시	50(40.7)	167(38.0)	477(32.8)	42(44.2)	13(38.2)	13(30.2)
	농촌	4(3.3)	72(16.4)	474(32.6)	3(3.2)	4(11.7)	13(30.2)
	(도농복합)						
구분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가처분소득(연간/만원)		2,679.2 (1,225.8)	1,916.4 (1,720.9)	978.9 (637.2)	2,477.7 (1,259.7)	3,051.4 (2,228.0)	2,180.9 (1,377.9)
생활만족도(5점 척도)		3.8(.5)	3.3(.8)	3.4(.7)	3.3(.7)	3.5(.7)	3.4(.6)
계		123(100.0)	440(100.0)	1,454(100.0)	95(100.0)	34(100.0)	43(100.0)

1) 1인가구 유형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선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비가 청년 및 중장년세대에서는 여성이 약간 많지만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노인1인가구의 가구주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80%를 넘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청년1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대 및 대학 학력 이상이 4/5를 초과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으며, 중장년1인가구의 경우 고졸이 31.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전문대졸 이상은 전체의 1/5 정도였다. 한편, 노인1인가구의 경우 무학과 초등학교 학력이 각각 2/5 수준으로 많았고, 중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학력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혼인상태를 보면, 청년1인가구의 경우 미혼인 상태가 약 8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유배우인 경우가 약 11% 수준이었고, 이혼이나 별거 상태인 경우도 약간 있었다. 중장년세대의 경우 이혼 및 별거인 경우가 가장 많은 42%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미혼으로 인한 비율이 31%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경우 88%가 사별인 상태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혼 및 별거가 약 9%였고, 미혼이거나 유배우 상태인 경우는 각각 약 2% 미만으로 적었다.

이들 1인가구의 경제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청년1인가구는 98% 이상이 비수급상태에 있었으며, 중장년 및 노인1인가구의 경우 각각 77%, 82%로 수급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는 약 11%, 중장년세대는 약 49%, 노인세대는 약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처분 소득은 청년이 약 2,67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청년세대와 비교할 때 중장년은 약 70% 수준에 해당하는 1,916만원, 노인세대는 1/3 수준인 약 979만

원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청년1인가구의 경우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은 약 11% 수준을 보였으나, 중장년이나 노인세대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각각 38%, 79%로 높았다. 청년세대는 가장 안정된 고용상태라 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많았다. 중장년세대는 상용직근로가 약간 많았으나 임시직이나 일용직 종사자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고 자영업 비율이 약 11%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세대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12%로 가장 높았다. 중장년세대와 노인세대 모두 자활이나 공공근로와 같은 형태에 종사하는 비율이 3%대로 비슷하게 낮았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1인가구의 비율은 노인이 3/5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세대는 종교 유무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청년세대는 종교 없는 경우가 3/5을 초과하였다. 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율은 청년세대가 가장 높고, 중장년, 노인 순이었으며, 농촌 거주율은 그 반대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는 모든 1인가구 유형에서 보통 수준 정도로 나타났으며, 청년, 노인, 중장년 순이었다.

2) 한부모가구 유형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성별을 보면, 조손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할머니인 경우가 약 65%로 할아버지인 경우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모자가구가 부자가구에 비해 더 많았다. 전문대졸 및 대졸 학력의 경우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조손가구의 경우 다른 한부모가구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학력 분포를 보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모자가구의 경우 미혼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부자가구의 경우 이혼 및 별거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아 한부모가구가 형성된 원인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유배우로 응답한 조손가구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손자녀와 사는 경우를 의미하며 약 37%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비교하면 조손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순이었으며, 조손 및 모자가구는 절반에 약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편, 저소득가구에 속하는 비율 역시 한부모가구 유형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같은 순서를 보였으나, 조손가구의 70% 이상이 저소득층에 해당하였으며, 모자가구는 약 57%, 부자가구는 약 32%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참가 현황을 보면, 부자가구의 경우 상용직 근로직 종사비율이 모자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모자가구는 상대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 비율이 높았다. 비경제활동비율은 조손가구가 가장 높아 약 80% 수준이었으며, 모자가구, 부자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비율은 모자, 조손, 부자가구 순으로 높았다. 이때, 모자 및 조손가구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각각 절반 수준이었으며, 부자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모자가구는 대도시 거주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며 농촌 지역 거주 비율은 3%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모자가구는 다른 한부모가구 유형에 비해 대도시 거주율이 가장 높고 농촌 거주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구는 모자가구보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율이 약간 낮았으며, 농촌 거주율은 조금 높았다. 조손가구의 경우 대도시 거주율이 약 40% 수준이었고,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율은 각각 약 30% 수준으로 비슷하였다.

## 2.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가정안전 수준

앞서 제시한 가정안전 지표 문항을 활용하여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유형별 가정안전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앞서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 1) 1인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정안전 수준

1인가구의 유형별로 가정안전 수준을 비교하면, 10개 문항에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평균 .5 미만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1인가구의 척도값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인1인가구가 .19 수준이었다. 청년1인가구는 .0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는 실제로 가정안전 수준을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경험을 한 1인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일원 분산분석(ANOVA) 결과, 이들 세 가구유형 집단의 가정안전 척도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세 유형 모두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났다.

절대적인 문제 사례수를 중심으로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1인가구의 경우, 5가구 이상이 겪은 가정안전 문제는 없었으나, 다만 자살의도, 건강보험급여 정지, 주거불안정, 공과금 연체, 신용불량 등에서 문제를 경험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문제를 경험한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1인가구의 경우, 30가구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심각한 가정안전 문제는 자살의도, 신용불량, 공과금 연체 순이었다. 다음으로 10가구 이상이 경험한 문제는 겨울난방 제한,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주거불안정 및 식생활 불균형, 건강보험 급여정지 등이었다. 한편, 5가구 이하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영역은 단전·단수 문제, 공교육비 연체문제로 나타났다.

노인1인가구의 경우, 자살의도를 가졌던 가구가 8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50가구 내외로 겪은 문제는 겨울난방 제한, 식생활 불균형 문제였다. 다음으로 20-30가구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공과금 연체, 신용불량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단전·단수 문제, 공교육비 연체문제, 건강보험급여 정지 문제는 5가구 이하로 낮게 발생하였다.

2) 한부모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정안전 수준

한부모가구의 유형별로 가정안전 수준을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정안전 척도값은 모자가정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손가구가 .25, 부자가구가 .2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들 세 집단 간 평균차이검증을 위한 일원분산분석(ANOVA)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항별 문제발생 빈도를 비교하면 모자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12가구가 경험한 공과금 연체, 10가구가 경험한 신용불량 문제였다. 이외에도 자살의도는 8가구로 다소 많았고, 5가구 미만이 경험

한 문제로는 주거불안정, 단전·단수, 공교육비 연체, 겨울난방제한, 건강보험급여 정지 등이 있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제한이나 식생활 불균형 문제는 경험한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부자가구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모든 문제 영역에서 5가구 미만이 경험하고 있으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영역은 주거불안정, 단전단수, 공교육비 연체,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건강보험급여 정지 등 5개 영역이었다.

조손가구의 경우에도 모두 5가구 미만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안전 척도의 문항별로 보면 겨울난방 제한,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문제가 각각 4가구로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식생활 불균형, 자살의도 문제가 각각 2가구, 1가구였다. 나머지 6개 영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구형태 및 혼인유형에 따른 가정안전 척도의 수준

	1인가구			한부모가구		
	청년단독	중장년단독	노인단독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1. 주거불안정	1 (.8)	17 (3.9)	11 (.8)	4 (4.2)	0 (.0)	0 (.0)
2. 공과금 연체	1 (.8)	34 (7.7)	23 (1.6)	12 (12.6)	2 (5.9)	0 (.0)
3. 단전·단수	0 (.0)	3 (.7)	3 (.2)	1 (1.1)	0 (.0)	0 (.0)
4. 공교육비 연체	0 (.0)	0 (.0)	0 (.0)	3 (3.2)	0 (.0)	0 (.0)
5. 겨울난방 제한	0 (.0)	19 (4.3)	50 (3.4)	3 (3.2)	1 (2.9)	4 (9.3)
6. 의료서비스 제한	0 (.0)	18 (4.1)	33 (2.3)	0 (.0)	0 (0)	4 (9.3)
7. 신용불량	1 (.8)	38 (8.6)	21 (1.4)	10 (10.5)	3 (8.8)	0 (.0)
8. 건강보험급여 정지	2 (1.6)	13 (3.0)	4 (.3)	2 (2.1)	0 (.0)	0 (.0)
9. 식생활 불균형	0 (.0)	17 (3.9)	49 (3.4)	0 (.0)	1 (2.9)	2 (4.7)
10. 자살의도	3 (4.9)	39 (8.9)	83 (5.7)	8 (8.4)	1 (2.9)	1 (2.3)
계	123 (100.0)	440 (100.0)	1,454 (100.0)	95 (100.0)	34 (100.0)	43 (100.0)
척도 평균(SD)	.07 (.28) <sup>a</sup>	.45 (1.06) <sup>b</sup>	.19 (.64) <sup>c</sup>	.45 (.93)	.23 (.55)	.25 (.73)
F값	24.591***			1.344		

### 3.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유형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유형에 따라 사회자본 변수, 즉 신뢰, 유대, 수용, 참여 변수의 수준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 1) 1인가구의 유형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모든 사회자본 변수에서 1인가구의 세대에 따른 집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수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민 간의 믿음을 나타내는 신뢰 변수의 경우, 신뢰의 유무에 따른 비율에서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유대와 수용은 모

든 세대에서 해당 사회자본이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한 참여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인 청년단독세대의 경우에도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중장년 및 노인1인가구의 경우 참여 수준은 각각 약 11%, 약 2%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인가구의 세대별 속성에 따라 사회자본 보유 현황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2) 한부모가구의 유형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한부모가구의 유형별로 사회자본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유대와 수용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두 사회자본 변수의 경우 모자가구나 부자가구에 비해 조손가구의 수준

<표 7> 가족체계에 따른 사회자본의 수준 차이 분석

		1인가구				한부모가구			
		청년단독 (N=123)	중장년단독 (N=440)	노인단독 (N=1,454)	X <sup>2</sup>	모자가구 (N=95)	부자가구 (N=34)	조손가구 (N=43)	X <sup>2</sup>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신뢰	없음	50 (40.7)	236 (53.6)	662 (45.5)	11.0 **	51 (53.7)	13 (38.2)	18 (22.0)	3.2
	있음	73 (59.3)	204 (46.4)	792 (54.5)		44 (46.3)	21 (61.8)	25 (58.1)	
유대	없음	6 (4.9)	94 (21.5)	420 (29.1)	40.3 ***	12 (12.6)	3 (8.8)	13 (31.0)	8.9 *
	있음	117 (95.1)	344 (78.5)	1,025 (70.9)		83 (87.4)	31 (91.2)	29 (69.0)	
수용	없음	21 (17.1)	113 (25.8)	510 (35.3)	27.5 ***	21 (22.1)	8 (23.5)	18 (42.9)	6.6 *
	있음	102 (82.9)	325 (74.2)	935 (64.7)		74 (77.9)	26 (76.5)	24 (57.1)	
참여	없음	88 (71.5)	394 (89.5)	1,424 (97.9)	178.4 ***	85 (89.5)	31 (91.2)	43 (100.0)	4.8
	있음	35 (28.5)	46 (10.5)	30 (2.1)		10 (10.5)	3 (8.8)	0 (.0)	

\*\*\* $p < .001$ , \*\* $p < .01$ , \* $p < .05$



이 높았다. 모자가구는 부자가구보다 유대에 있어서는 약간 낮았으나, 수용 변수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인 신뢰 변수의 경우 부자, 조손, 모자 가구의 순으로 보유비율이 높았다. 특히 참여 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1인가구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보유수준을 보였다. 조손가구의 경우 전혀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참여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저소득 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가구유형을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를 저소득 여부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저소득 여부에 따른 1인가구 유형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1인가구의 세대에 따른 유형별로 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경우 사회자본 수준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신뢰에서만, 중장년1인가구의 경우 유대와 참여에서, 노인1인가구의 경우 유대에서만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사례수가 매우 적었음에도, 신뢰 변수의 수준이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표 8> 1인가구의 저소득 여부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분석

		청년1인가구 (N=123)			중장년1인가구 (N=440)			노인1인가구 (N=1,454)		
		일반 (N=109)	저소득 (N=14)	X <sup>2</sup>	일반 (N=224)	저소득 (N=216)	X <sup>2</sup>	일반 (N=212)	저소득 (N=1,242)	X <sup>2</su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신뢰	없음	49 (45.0)	1 (7.1)	7.4 **	114 (50.9)	122 (56.5)	1.4	94 (44.3)	568 (45.7)	.1
	있음	60 (55.0)	13 (92.9)		110 (49.1)	94 (43.5)		118 (55.7)	674 (54.3)	
유대	없음	6 (5.5)	0 (.0)	.8	35 (15.6)	59 (27.6)	9.3 **	42 (20.0)	378 (30.6)	9.8 **
	있음	103 (94.5)	14 (100.0)		189 (84.4)	155 (72.4)		168 (80.0)	857 (69.4)	
수용	없음	21 (19.3)	0 (.0)	3.3	62 (27.7)	51 (23.8)	.84	67 (31.9)	443 (35.9)	1.2
	있음	88 (80.7)	14 (100.0)		162 (72.3)	163 (76.2)		143 (68.1)	792 (64.1)	
참여	없음	78 (71.6)	10 (71.4)	.0	186 (83.0)	208 (96.3)	20.7 ***	198 (93.4)	1,226 (98.7)	25.3
	있음	31 (28.4)	4 (28.6)		38 (17.0)	8 (3.7)		14 (6.6)	16 (1.3)	

\*\*\* $p < .001$ , \*\* $p < .01$ , \* $p < .05$

사회자본 변수인 유대, 수용 참여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중장년1인가구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유대와 참여 변수의 수준이 저소득 가구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신뢰와 수용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1인가구의 경우 유대 변수의 수준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2) 저소득 여부에 따른 한부모가구 유형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저소득 여부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사회자본 변

수의 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 모자가구에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간에 차이가 있는 사회자본 변수는 참여만이 유일하였으며, 조손가구에서는 수용 변수만이 유일하였다. 부자가구에서는 저소득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 사회자본 변수가 없었다. 모자가구의 경우 참여 변수는 저소득가구에서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조손가구에서 수용 변수는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조손가구에서 참여 변수는 참여경험이 있는 사례 수의 부족으로 인해 교차분석이 불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9> 한부모가구의 저소득 여부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분석

		모자가구 (N=95)			부자가구 (N=34)			조손가구 (N=43)		
		일반 (N=41)	저소득 (N=54)	X <sup>2</sup>	일반 (N=23)	저소득 (N=11)	X <sup>2</sup>	일반 (N=12)	저소득 (N=31)	X <sup>2</sup>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신뢰	없음	26 (63.4)	25 (46.3)	2.7	9 (39.1)	4 (36.4)	.0	3 (25.0)	15 (48.4)	1.9
	있음	15 (36.6)	29 (53.7)		14 (60.9)	7 (63.6)		9 (75.0)	16 (51.6)	
유대	없음	5 (12.2)	7 (13.0)	.0	2 (8.7)	1 (9.1)	.0	4 (33.3)	9 (30.0)	.1
	있음	36 (87.8)	47 (87.0)		21 (91.3)	10 (90.9)		8 (66.7)	21 (70.0)	
수용	없음	11 (26.8)	10 (18.5)	.9	5 (21.7)	3 (27.3)	.1	8 (66.7)	10 (33.3)	3.9 *
	있음	30 (73.2)	44 (81.5)		18 (78.3)	8 (72.7)		4 (33.3)	20 (66.7)	
참여	없음	33 (80.5)	52 (3.7)	6.2 *	20 (87.0)	11 (100.0)	1.5	12 (100.0)	31 (100.0)	-
	있음	8 (19.5)	2 (3.7)		3 (13.0)	0 (.0)		0 (.0)	0 (.0)	

\*\*\*p<.001, \*\*p<.01, \*p<.05

5. 저소득가구의 사회자본이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효과

1인가구 유형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가구에서 사회자본이 가정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가정안전이 되며, 독립변수는 사회자본지표가 된다. 이때 앞서 조작적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네 가지 변수를 합한 수준을 사회자본지표로 정의하여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

별, 교육수준, 인터넷 이용, 건강상태, 경제활동참가, 거주지역, 가구유형 등이 포함되었다. 각 회귀분석 모델은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저소득 1인가구의 사회자본이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효과

저소득 1인가구의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유형별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청년저소득1인가구는 사례 수도 부족하고 종속변수인 가정안전 수준에 전

<표 10> 저소득 1인가구의 사회자본 수준이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효과

	전체 저소득1인가구		중장년 저소득1인가구		노인 저소득1인가구	
	B	SE	B	SE	B	SE
사회자본지표	-.05 *	.02	-.19 *	.09	-.02	.02
통제변수						
남성	.20 **	.06	-.09	.19	.30 ***	.06
교육수준(기준: 초졸이하)						
중졸	.07	.07	-.44 †	.26	.20 **	.07
고졸 이상	.01	.08			-.07	.09
인터넷 이용	-.30 **	.11	-.51 *	.25	-.11	.16
건강상태	-.13 ***	.03	-.31 **		-.10 ***	.03
경제활동참가	-.03	.05	.07	.21	-.04	.05
거주지역(기준: 농촌)						
중소도시	.09 †	.05	-.12	.28	.10 *	.05
대도시	.15 *	.05	-.01	.26	.15 **	.05
가구유형(기준: 중장년단독)						
청년단독	-.75 **	.24				
노인단독	-.40 ***	.07				
상수	.45 **	.17	.59	.61	-.10	.19
Adj. R <sup>2</sup>	.293		.298		.240	
F	12.385 ***		2.978 **		8.328 ***	
N	1,463		214		1,235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

주. 청년1인가구는 종속변수인 가정안전 변수의 특성이 서로 다른 사례 수의 부족으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제외함. 단, 저소득1인가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에는 포함되었음.

혀 차이가 없어 가구유형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전체 저소득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 모델에는 이를 포함하였다.

저소득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설명력은 .293 수준이었고 분산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사회자본변수는 가정안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의 가정안전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가 규명되었다. 사회자본지표가 한 단위 올라갈 때, 저소득1인가구의 가정안전 척도 값은 .05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각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보다 남성일 경우에, 인터넷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농촌에 비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청년1인가구나 노인1인가구에 비해 중장년1인가구일 경우에 가정안전의 수준이 유의하게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저소득1인가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298이고 분산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자본지표가 높을수록 가정안전 척도값이 낮아 사회자본이 가정안전의 위험도를 저하시키는 자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 가운데, 중졸 학력이 초졸 이하 학력에 비해,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으면 없는 경우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정안전 수준이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저소득1인가구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은 모델의 설명력은 .240이었으며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모델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가정안전에 대한 사회자본지표의 독립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오히려 학력수준이 중졸인 경우 초졸 이하인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농촌에 비해 중소도시나 대도시거주자인 경우에 가정안전 수준이 더 유의하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저소득한부모가구의 사회자본이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효과

사회자본이 저소득한부모가구의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저소득한부모가구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안전에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238수준이고 분산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자본지표는 가정안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의 통제변수 가운데 농촌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조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일 경우에 가정안전 척도 값이 유의하게 높아 더 심각한 가정안전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모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301 수준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이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사회자본지표는 가정안전 수준을 설명함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 중 초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중졸인 경우에, 이혼이나 별거 집단에 비해 사별인 경우에 가정안전문제가 더 심각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부자가구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이 가정안전 문제를 저하시키는 데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지표 값이 1점 높아질수록 가정안전척도가 .78만큼 감소하여 가정안전에 있어 취약요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통제변수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소득조손가구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지표와 가정안전 수준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제변수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인 경우 가정안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저소득한부모가구 및 가구유형별 사회자본 수준이 가정안전 수준에 미치는 효과

	저소득한부모가구		저소득모자가구		저소득부자가구		저소득조손가구	
	B	SE	B	SE	B	SE	B	SE
사회자본지표	.02	.11	.11	.18	-.78 *	.07	.06	.16
통제변수								
남성	.50	.38					.58	.42
교육수준(기준: 초졸이하)								
중졸	.24	.42	2.37 †	1.36	2.43	.38	-.28	.70
고졸 이상	-.43	.40	.43	1.10	1.63	.40	-.84	.73
혼인상태 (기준: 이혼/별거/유배우)								
사별			1.46 †	.85	.25	.20	.47	.36
인터넷 이용	.44	.26	.37	.33	1.83	.49	.80	.97
건강상태	-.16	.11	-.28 †	.15	-.23	.13	-.04	.23
경제활동참가	-.02	.23	.07	.33	.23	.27	-.35	.44
거주지역(기준: 농촌)								
중소도시	.73 *	.32	.82 †	.65	.57	.50	.65 †	.40
대도시	.10	.31	.06	.64	.30	.38	.01	.41
가구유형(기준: 조손가구)								
모자가구	.96 *	.47						
부자가구	.15	.44						
상수	-.98	.42	-.78	0.40	-.89	.50	.58	.43
Adj. R <sup>2</sup>	.238		.301		.252		.214	
F	3.356 **		4.526 **		9.528 **		4.561 **	
N	95		54		11		30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복지패널 제10차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체계 중 가족규모와 양육구조를 고려한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가정안전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들이 보유한 사회자본이 저소득층의 가정안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체계의 차이에서 비롯한 자원 부재 또는 결핍의 상황 하에서 각 가구유형별로 가정안전의 개념으로 측정된 생활여건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요한 가족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의 보유현황과 더불어 사회자본이 가정생활문제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가정안전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안전 수준에 문제가 심각한 집단을 살펴보면 1인가구중에서는 중장년, 노인, 청년 순으로, 한부모가구 중에서는 모자가구, 조손가구, 부자가구 순으로 가정안전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정안전 척도의 하위영역은 모든 가구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1인가구에서는 자살의향이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한부모가구 중 모부자가구에서는 공과금연체, 신용불량, 조손가구에서는 겨울난방과 의로서비스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문제로 나타났다.

둘째, 1인가구의 유형별로 사회자본의 수준을 비교하면, 청년, 중장년, 노인단독 세대가 보유한 신뢰, 유대, 수용, 참여 등 모든 사회자본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젊은 세대이면서 1인가구를 구성하는 청년1인가구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보유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중장년 및 노인세대의 특성과는 뚜렷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사회자본의 보유구조를 보면, 가치나 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신뢰, 유대, 수용 등의 사회자본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았으나, 실천영역에 해당하는 참여 변수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가장 저조하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사회자본 현황의 한 단면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청년1인가구의 경우 신뢰에서만, 중장년1인가구의 경우 유대와 참여에서, 노인1인가구의 경우 유대 변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자본과 경제적 자원 결핍과의 연관성도 알 수 있다. 또한, 1인가구의 가구유형 집단별로 모든 사회자본 변수를 통합한 사회자본지표의 경우 저소득1인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중장년저소득1인가구에서 가정안전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자원임이 규명되었다.

셋째, 한부모가구에서도 가구유형별로 사회자본 보유 수준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회자본 변수 중 유대와 수용에서는 모자, 부자, 조손가구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신뢰나 참여의 경우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일반가구와 저소득집단 간의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면, 모자가구의 경우 참여 변수에서, 조손가구의 경우 수용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저소득한부모가구에서 사회자본의 가정안전에 대한 독립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저소득부자가구 모델에서만 사회자본이 유의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정안전과 사회자본의 이론적 개념화와 이를 활용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건강성 지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안전 척도에 대한 결과를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나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대체로 모든 가구유형에서 가정안전 척도의 평균값을 보면, 10개 항목 가운데 평균 5개미만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높다고 진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장지연(2012)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강화된 우리사회의 사회보장과 안전망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별 가구는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절대적 가정안전 취약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존의 가정건강성 척도에서 최저수준의 자원 빈곤이나 결핍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하위진단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장 높은 빈도로 문제가 되는 문항을 우선적인 대안문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정 가구유형의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집단에서 보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안전 척도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최저기준을 최소 1~2개 정도의 위험을 경험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접근하고, 이후 단계별 취약점을 유형화하여 가정안전 관점에서 취약가구로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관리지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문항의 내용을 보완할 때 가족관계지표나 외부관계지표 역시 그에 맞는 최저기준선을 포함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건강성 전체지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천현장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가족들에 대한 경험적 자료의 질적·양적 축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완된 가정건강성 지표는 가족의 보편적이면서 특수한 상황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예측하고 평균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인가구나 한부모가구는 동일한 가구형태로 분류되에도 하위 가구유형별 사회자본의 분포에 주목할 때, 가정안전의 증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의 도출과정에는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자본의 개념은 학문적 관심이나 주요 관점에 따라 달리 강조되어 적용되면서 단순하게 한정짓기가 어렵고 측정방법 또한 다소 애매함에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뢰, 유대, 수용, 참여와 같은 주요 사회자본의 속성은 가구유형별 보유 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특히, 다른 세대와 사회자본의 보유수준에서 차이가 뚜렷한 젊은 세대에서 1인가구를 형성할 때,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음에도 이들이 지닌 높은 사회자본은 결국 1인가구가 처할 우려가 높은 자원의 결핍상황을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즉, 개별성의 한계를 사회자본의 공동체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에 대한 확인을 통해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내용과 범위에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소득청년1인가구의 경우, 신뢰, 유대, 수용과 같은 사회자본 변수는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미래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처럼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가지는 경향은 한부모가

구 중 모자가구에서 신뢰 변수, 조손가구에서 수용 변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이 지니는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이 궁극적으로 외부환경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사회적 연계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자본은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가정안전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가 규명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저소득1인가구의 경우, 청년이나 노인세대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1인가구유형에 해당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가정안전 척도에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취약한 가정안전의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도 높은 집단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중장년단독세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각종 세제나 정부지원 혜택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가족단위 지원프로그램 수혜에서도 소외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중장년1인가구의 장기적 생활설계를 위한 대안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한편, 한부모가구 유형 중 저소득부자가구에서만 사회자본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유형의 경우 가정안전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모자가구나 조손가구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지닌 사회자본 수준이 일반가구와 차이가 없는 높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자본변수가 가정안전 문제의 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의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특히 부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계망을 강화하여 사회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한부모가구의 경우 부

족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한 돌봄의 결핍이 미래 자녀세대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정태식 역, 2016)는 점에서 사회투자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도 그러하다. 나아가 이들 세대 간 사회자본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부모는 물론 자녀세대의 가족 및 사회 문제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하여 다층적 분석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사회자본 변수 중 가치관이나 태도, 의식 등의 문제와 관련된 신뢰나 유대, 수용의 수준에 비해 실천활동과 연계된 자원봉사 및 기부에 대한 참여 수준은 전체 1인가구세대별, 한부모가구 유형별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2.8%에 불과하던 성인 인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5년 현재 5.1%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통계청, 2016),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진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기부참여율도 전체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장후석, 2016). 따라서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전반적 지원방안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일회성 행사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세대를 통합하거나 가족단위로 구성하여 지속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서 혼자 사는 1인가구를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고, 일방적 지원보다는 가족단위의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저변이 얇은 자원봉사 현황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20대 미만 연령집단에서는 1999년 33.8%에서 2015년 현재 참여율이 76.6%로 증가하였으므로(통계청, 각년도), 향후 이 미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에 익숙한 이들 세대를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장기적 참여 수준은 훨씬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약점과 더불어,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자료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안전의 지표는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으로서의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추후 세대별 분포결과를 참고하여 문항 수와 질문내용을 조절하는 등 척도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경우 저소득가구 사례수가 부족하고 가정안전 수준에 있어 동질적이라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회귀 분석 실시가 불가하였으므로 추후 한국복지패널의 자료수집단계에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1인가구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한부모가구의 사례 역시 다른 패널자료에 비해 많이 표집되었음에도, 실제 분석모델에서는 가구단위가 적어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얻기 어려운 측면도 발견되었으므로 표집설계에서 이러한 측면이 보다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이 특정한 가족체계 내에서 가정안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았다. 특히, 사회자본이 가족자원으로서 지니는 의의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에 따른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의 학문적 연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보유특성에 따라 실제로 서로 다른 가족체계에 따른 전혀 상반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사회자본의 측정과 그에 따른 효과의 정도 및 방향성 논의가 이론적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1인가구의 사회자본 보유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자원의 개념을 원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공동체, 사회관계망 등의 측면에



서 더 확장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종단연구인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의 청년단독세대의 자원관리와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효과를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지금까지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가정건강성의 최저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안전 개념을 제안하고, 더불어 사회자본이라는 가족자원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서 비롯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를 통해 향후 가족자원관리학 분야의 가정건강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외연이 보다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현숙(2016). 한부모가정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성별, 한부모기간, 교급에 따른 차이. *학교사회복지*, 35, 275-302.
- 2)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 3) 나영선 · 이재열 · 한준상 · 이경목 · 한성안 (2005).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 노영주 · 허정원 · 서지원 · 서선희(1999). ‘가정 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11.
- 5) 박경숙 · 김미선(2016).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50(1), 221-253.
- 6) 보건복지부(2016). [www.mohw.go.kr](http://www.mohw.go.kr).
- 7) 서울특별시(2016). <http://citybuild.seoul.go.kr>.
- 8) 서지원(2006).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9) 서지원(2013). 한부모가족 사회적 자원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03-124.
- 10)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157-181.
- 11) 여성가족부(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12) 여성가족부(2016).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13) 임채원(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과주* : 한울.
- 14) 장지연(2012). 복지국가의 고용과 사회안전망. *노동리뷰*, 34-44.
- 15) 장후석(2016). 나눔의 경제학: 영미와 비교한 한국 나눔 문화의 7대 특징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16) 정순희 · 임은정(2014).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 17) 정태식 역(2016). 우리 아이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 Putnam, D. R.(2016).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서울 : 페이퍼로드.
- 18) 조희금 · 김경신 · 정민자 · 송혜림 · 이승미 · 성미애 · 이현아(2006). *건강가정론*. 서울 : 신정.
- 19)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가정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20) 최일섭(1999). 제3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복지.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 7-21.
- 21) 통계청(2016). [e-나라지표\(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2)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23) 보건복지부(201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 24) Bourdieu, P.(1986). The form of capital. In J. G. Ricah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Press.

- 25) Coleman, J. S.(200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In P. Dasgupta &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13- 39. Washington, D. C. :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26) Field, J.(2003).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27) Grootaert, C. & Basterleer, T.(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 A multidisciplinary tool for practitioners*. Washington, D. C. : World Bank.
- 28)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29) Parcel, T. L. & Menaghan, E. G.(1994). Early parental work, family social capital, and early childhood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4), 972-1009.
- 30)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31) Putna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32) Whiteley, P. F.(2002).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Political Studies*, 48(3), 443-466.
- 33) World Bank(2012).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 투 고 일 : 2017년 3월 1일
- 심 사 일 : 2017년 4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7일